

## 해방정국에서의 古下 宋鎮禹의 사상과 노선

김학준 (단국대학교 이사장)

### 1. 머리말

오는 12월 30일로 우리는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의 50주기를 맞는다. 지금으로부터 꼭 반세기 전인 1945년 12월 30일, 고하는 해방정국의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 만 55세라는 연부역강의 나이에 아깝게도 암살되는 비운을 만났던 것이다. 이 세계에 해방정국에서 고하가 제시했던 노선과 고하 스스로 취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피려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 2. 해방공간에서의 고하의 정치 노선

해방정국에서 나타난 고하의 노선과 행동을 분석하는 데 단서가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고하가 조선총독부의 협력 요청 교섭을 거부하면서 제시했던 입장이다. 이 입장은 1백 37일로 끝나고 마는 해방정국 아래서의 그의 삶에 있어서 일관된 것으로, 달리 표현한다면, 해방정국 아래서의 노선과 행동은 이 입장의 확인이면서 확대였다고 하겠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항복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고하를 비롯한 극소수의 명망 있는 조선 민족 지도자들을 상대로 일제 패망 이후의 상황 관리(管理)에 대해 협의했다. 이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특히 총독부와 고하 사이의 교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출판되어 나온 문헌들의 설명에 있어서 혼선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김준연설(1945년, 1946년 및 1959년), 한국민주당설(1948년), 엔도 류우사쿠(遠藤柳作)설(1957년), 이기하설(1961년),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설(1964년), 홍승면설(1965년), 조순승설(1967년), 핸더슨설(Gregory Henderson, 1968년), 최하영설(1968년), 이영근설(1970년), 스칼라피노설(Robert A. Scalapino), 이인설(1968년), 김대상설(1977년), 이동화설(1978년), 커밍스설(Bruce Cumings, 1981년), 강만길설(1984년), 진덕규설(1989년), 이상돈설(1990년)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들 사이에는 같은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점도 있는 것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 다양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다루지 못해 유감이다. 그러나

이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떠오른다.

첫째,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결정한 시점에서부터 그것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까지 고하를 상대로 시국 수습을 위한 행정권의 부분적 이양을 여러 통로를 통해 여러 차례 교섭했다. 정권의 이양을 교섭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치안유지권을 비롯한 행정권의 상당한 부분을 넘겨주려고 했음은 사실이다.

둘째, 조선총독부의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총독이나 엔도 정무총감이 고하와의 교섭에 스스로 나선 일은 한 차례도 없다. 그들은 고하가 일제에 대한 협력을 이미 여러 차례 거절했음을 고려하여 스스로 나서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 의사를 타진해 보고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 그제서야 직접 교섭해 보려고 한 것 같다.

셋째, 고하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모두 거절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일이 전혀 없다.

넷째, 고하가 끝내 거절하자 김준연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했다. 고하를 심복하던 김준연이 응하면 고하도 결국 나서게 될 것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준연도 끝내 거절했다.

다섯째, 고하의 거절 명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됐다. ①일제로부터 이양 받으면 일제의 괴뢰 또는 민족반역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②연합국으로부터 이양 받되 조선인의 「국민대회」 또는 「민중대회」를 통해 이양 받아야 정당한 것이 되며, ③이양 받는 주체는 해외의 독립투사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필자의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섯째 항목이다. 이 항목에 나타난 고하의 주장에 민족 해방에 임하는 고하의 노선과 행동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이 세 가지 거절 명분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고하는 침략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받았다가 괴뢰가 되고 만 사례로 중국의 왕자오밍(汪兆銘)과 프랑스의 페탕(Henri Philippe Petain) 및 필리핀의 라우렐(Jose Pacciano Laurel)을 꼽았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왕자오밍은 1885년에 태어나 국민당 정부의 행정원장으로까지 올랐다. 자(字)를 정위(精衛)라고 했던 그는 일제의 중국 침략으로 말미암아 1937년에 빚어진 제2차 중일전쟁 도중에 반공과 대일(對日) 화평을 기도하여 일제와 손잡고 1940년에 남경에 이른바 신국민정부(新國民政府)를 수립하고 주석으로 취임했다. 이 정부는 물론 일제의 괴뢰정부로 간주됐다. 그는 일제 패망 직전인 1944년에 일본에서 병사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일제에 의해 독살됐다는 풍문이 자자했다.

페탕은 제1차 세계 대전 때 독일과의 베르덩 전투에서 무공을 세워 국민적 영웅으로 존경받았고 그 뒤 내각에 각료로 참여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에 협력해 비시에서 괴뢰정부를 세워 국가 주석이 됐던 것이다. 종전과 함께 체포되어 반역죄로 재판 받아 종신형을 복역하다가 죽었다.

라우렐은 필리핀의 상원의원과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뒤 일제의 필리핀 점령기간인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세운 괴뢰정부의 대통령으로 일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전후에 일단 전범으로 기소됐다가 석방됐다.

세사람의 행로를 이렇게 살필 때, 아니, 세사람의 행로를 굳이 살피지 않는다고 해도, 행정권의 일부이든 전부이든 일제로부터 받으면 일제의 협력자가 되고 괴뢰가 되며 민족의 지탄을 받는 만큼 그 길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 의연한 처사이기도 했다. 더구나 고하는 일제 치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옥되어 통산 1년 10개월 정도 영어의 생활을 보냈던 항일 민족지도자였다. 이러한 경력의 그로서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이양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고하는 제2차 중·일전쟁 이후 몇 해 동안은 행동적인 반일에 소극적이어서 일부에서는 때로는 오해도 없지 않은 처지였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마키아벨리적인 해석을 시도한다면, 고하는, 일제의 패망은 불을 보듯이 빠른 판에, 그리하여 그가 늘 강조하던 조선인의 정치 시대가 열리게 되는 판에, 그렇게 되면 자신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판에, 굳이 일제로부터 그것도 제한된 범위의 행정권을 이양 받아 행여 친일 괴뢰의 비난을 받기라도 한다면 결정적 손실이 아니겠냐고 계산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일제로부터 권력을 어떤 형태로든 이양 받아서는 안된다는 고하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古下 宋鎮禹 선생전』이 밝힌 그의 발언 내용, 곧 『아직 일본이 연합국측에 항복하겠다는 것뿐이지, 일본의 세력은 국내에 엄연히 남아 있지 않소? [---] 일본 세력이 엄연히 있는 이 때, 그 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일본 세력의 연장이며 일본이 잘못된 것을, 일본의 뜻을 받들어 뒤치다꺼리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겠소?』는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이었다는 뜻이다.

둘째, 고하는 연합국으로부터 이양 받되 조선인의 「국민대회」나 「민중대회」를 통해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선 논의돼야 할 사항은 『연합국으로부터 이양 받는다』는 부분이다. 고하는 왜 이러한 논리를 편 것일까?

고하는 일제 말기에 단파 방송의 직접적 및 간접적 청취를 통해,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선언을 통해 연합국이 『한민족은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될 것』임을 다짐했다는 소식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하는 일제가 패망한 이후 한민족은 연합국의 강력하면서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동지들에게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연합군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은 것은 없는 것이오』라고 말했던 것으로 『古下 宋鎮禹 선생전』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전망에, 연합국을 자유와 정의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간주하는 그의 연합국 인식이 겹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가 『연합국으로부터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연합국으로부터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선인의 「국민대회」나 「민중대회」를 통해 이양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 것도 중시돼야 할 부분이

다. 그는 불가피하게 연합국으로부터 이양 받는다고 해도, 한민족의 대표 기구를 통해 이양 받는 절차를 밟아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셋째, 고하는 이양 받는 주체를 해외의 독립지사 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못박았다. 임정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그의 임정봉대론은 이미 이 시점에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의 임정봉대론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임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갈래다. 임정이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민족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한 한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망명정부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고, 그 2개의 입장 사이에도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다.

임정이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에도 근거는 있다. 임정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으로 표출된 한민족의 복국(復國) 노력의 산물로 1919년 4월 13일에 중국에서 출범했으나 곧바로 내분에 휩싸였고 이탈 세력들이 속출해 1925년 이후에는 사실상 김구가 주재하던 한국독립당 세력 정도가 참여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독립운동 세력쪽에서 볼 때는 항일 실적이 크지 않은 존재로 여겨질 뿐이었다. 또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임정을 임시정부로도, 망명정부로도 인정하지 아니했으며, 교전 단체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정이 중간에 침체의 기간을 길게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출발점은 한민족의 거족적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이었다는 점이 중시돼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3·1운동의 즉각적인 여파로 조선 8도의 대표들이 집결해 임시정부로 출범시킨 민족적 대표기관이었음은 언제나 기억돼야 할 것이다.

또 임정이 1940년대에 들어와 다시 활성화 됐다는 사실이 지적돼야 하겠다. 임정은 임정이 이끌었던 1932년의 이봉창의사 의거와 윤봉길의사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은 것을 바탕으로 삼아 1940년 9월에는 한국광복군을 창군했으며, 비록 전면적 범위의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좌우합작을 실현해 통일전선적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1941년 12월 9일에는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임정에 대한 식민지 조선 백성들의 인식이다. 구체적 수치를 갖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식민지 조선 백성들은 대체로 『중국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임정에 대한 그 나름의 기대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고하의 임정봉대론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신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고하의 임정봉대론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 3. 해방공간에서의 고하의 정치 행동

해방공간에서 고하가 취한 정치 행동의 기간은 1백 37일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

그 해의 12월 30일에 암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그는 우리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의 궤도를 깔아 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작업을 이끌었던 하나의 일관된 노선이 바로 그 「세 가지 정견」이었다. 바꿔 말해, 해방 이후 1백 37일에 걸쳤던 그의 정치활동은 그가 조선총독부의 제의를 거부하면서 밝혔던 「세 가지 정견」의 구체화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 1) 건준·인공의 거부

고하의 거부와는 대조적으로, 항일 민족 지도자 몽양 여운형이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조선총독부의 교섭에 응해 그 날 저녁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약칭 건준)를 발족시켰던 사실, 그리고 이 건준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급조시켰던 사실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필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기에 지면이 제약되어 있는 이 글에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하게 상기해야 할 사실은 고하는 건준과 인공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공에 대해서는 타도를 부르짖는 데 선봉의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고하의 인공타도론은 그가 총독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시했던 「세 가지 정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몽양이, 비록 민족적 여망을 상당히 많이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다섯가지 조건에 대해 총독부의 동의를 받아 낸 기초 위에서 건준을 발족시켰다고 해도,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받은 것이 그에게는 몹시 못마땅했던 것이다. 더구나 건준이 차차 조선공산당의 강력한 영향 아래 움직이면서 인공을 선포하고 내각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임정봉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점은 고하의 노선에 질게 깔려 있는 반공주의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혐오했고 공산주의 아래서는 민족과 국가가 번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특히 소련의 제국주의적 대외 형태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에게 건준 그 자체도 용공시 됐는데 더구나 인공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와 동일시됐던 것이다. 이 반공주의가 더더욱 그로 하여금 인공타도의 대열을 이끌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 2) 한민당 창당, 그리고 미군정과의 제휴

이러한 배경에서 미군의 남한 진주는 고하에게 자신의 「세 가지 정견」에 입각해 정치활동 또는 건국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 그리하여 고하는 이 무렵인 1945년 9월 7일에 한국민주당(약칭 한민당) 발기대회를 주도하고 21일에 마침내 한민당의 당수격인 수석총무에 선출됐다.

한민당은 고하의 정치적 노선에서 「세 가지 정견」에 입각한 정당이었다. 한민

당은 「임정봉대 인공타도」를 부르짖었으며, 연합군환영회를 주도했으며, 또 국민대회준비회를 개최했다.

이 대목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대회 형식에 대한 고하의 집착이었다. 그 점은 8월 15일 직후 평양의 고당 조만식이 장거리 전화로 『일본인 도지사가 행정권을 받으라고 하니 받아도 좋겠느냐』고 물어 왔을 때, 『개인 자격으로 받지 말고 민중대회를 열어서 민중의 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권고해 준 데서도 잘 나타나 있었다.

한민당의 창당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제시한 학자들도 적지 않다. 이기하(李起夏)는 한민당의 발족으로 “광복 후 처음으로 민족진영의 대세력이 뭉쳐 아직까지 유아독존 안하무인격으로 날뛰던 좌익세력을 견제·제어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진덕규 교수도 “좌경세력의 독주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갈래로 조직된 세력이 결집되어 한국민주당으로 태동”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심지연은 『한민당의 창당은 정국의 좌경화를 막고 정치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이기택(李基澤)은 『한민당은 해방과 더불어 표면화한 좌익세력과 우익진영의 대립 속에서 우익측 인사들로 결성된 「보수반공연합체」의 정당이었다. 한민당에 참여했던 지식인들 중에는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 유학한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민당의 발족과 동시에 고하는 미군정과 한민당의 제휴를 성립시켰다. 반공세력의 지지를 바라던 미군정은 반공의 노선을 강조한 한민당을 필요로 했고, 국내적 지지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에 맞서 싸우려는 한민당으로서는 미군정과 제휴가 절실했다. 특히 고하의 경우, 『古下 宋鎮禹 선생전』이 쓰고 있듯이, 『한국은 잠정적인 훈정기(訓政期)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미군정을 도와서 정부수립시에 필요한 행정과 사법·입법의 민주주의 절차를 배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 3) 정당 통합의 시도와 좌절 속에서의 古下의 활동

한민당을 발족시켜 미군정과 제휴를 성립시킴으로써 국내 우익의 현실적 정치권력을 강화시킨 뒤 고하는 인공으로 대표되는 좌익과의 투쟁을 본격화 시켰다. 이 무렵인 1945년 10월 16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했다. 이승만은 난립해 있는 정당들의 통합 운동에 나섰으며, 고하는 기꺼이 그를 도왔다. 그러나 이승만의 정당 통합 운동은 실패했고, 좌우익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좌익은 이승만을 규탄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이승만과 고하의, 그리고 한민당의 제휴는 굳어졌다.

한달 뒤인 1945년 11월 23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

식 등 제1진이 귀국했다. 임정봉대를 외쳤던 고하와 한민당은 임정 인사들을 떠받들고자 했다. 그러나 임정의 간부들은 「국내 인사 숙청론」을 폈으며, 이것은 고하·한민당과 임정 사이에 간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 4)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古下

남한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굳어져 갔다. 동시에 남한과 북한 사이의 장벽 역시 굳어져 갔다. 북한에서는 소련 점령군의 북한 소비에트화정책이 착착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45년 12월 하순에 모스크바에서는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고, 한민족에 관한 4개항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서도 이미 참으로 많은 분석들이 나와 있고, 필자 역시 자신의 분석을 자세히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 다루기로 하겠다.

4개항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제3항의 신탁통치 조항이었다. 고하는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연합국과의 협력을 중시한 그로서 연합국의, 특히 미군정의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길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하의 그러한 태도는 전면적 반탁을 부르짖는 임정의 불만의 초점이 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하는 12월 30일 새벽 암살되고 말았다.

#### 4. 맺음말

고하가 암살된 뒤 남한 해방정국의 전개 과정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긴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한민당에 국한시켜 매우 짧게 말하기로 한다.

한민당은 고하의 뒤를 이어 당수직을 맡은 인촌 김성수가 이끌어 나가게 되며, 임정과는 대립되는 가운데 이승만과 손을 잡고 이승만의 노선을 뒷받침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점 때문에, 대한민국 수립을 단정이라는 분단체제의 수립으로 파악하는 이들에게 고하는 한민당과 더불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립은 북한과의 대결 관계에서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들에게 고하는 그 기초공사를 다진 선구적 일꾼으로 기억되고 있다. 고하가 설정한 친미-반공 노선이 없이는, 그리고 그 궤도 위에서 한민당이 남한 내부의 좌익 및 북한과 투쟁하지 않았다면, 남한은 최소한 민족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공산화되었거나 최악의 경우 소비에트화 되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보는 것이다.

**김학준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이사장, 시립인천대학교 총장, 동아일보 사장,  
동아일보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및 단국대 우석한국영토연구소 소장.